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규열



올해는 2012년이다.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2012년이다. 그러나 일본은 평년 23년이다. 행정부 수반의 공식명칭은 내각총리대신이다. 천황이 바뀌면 연호도 바뀌고, 수상은 천황의 신하인 것이다. 수많은 무사정권을 거쳤지만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15세기 이상 변함없이 천황의 나라다.

일 힐센 사람이 누구냐고, 자기들도 모른다. 조금 성의있고 시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대략 20~30명의 이름이 나온다. 그런데 그 이름들도 정치인은 몇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인가? 당연히 아니다. 메이지 천황과 전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히로히토 천황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천황은 통치에 있어서 정통성의 상징일 뿐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누가 통치하는가?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수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수상은 통치행위에 있어서 권력자가 아니다.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중앙집권제를 채택해온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일본의 권력구조가 궁극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사람에게 좀 유치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본다. 일본에서 제

네덜란드의 언론인 율프렌은 일본의 권력구조의 수수께끼라는 책을 통해 일본에는 절대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각 분야의 복수의 관리자들에 의해 그때 그때 관리될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헌법은, 일본은 의원내각제의 민주주의국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입법권은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중의원, 참의원)에 있다. 따라서 국회는 법적으로는 모든 것의 결재자이어야 하지만, 일본의 국회는 그렇지 못하다.

한일외교의 이상과 현실

합, 법조계, 렌고(노동조합) 등의 거대 압력단체도 들 수 있지만, 그들 또한 압력단체로서의 지분은 인정되지만 권력을 갖지는 못한다. 일본 사회는 어떤 절대 권력자에 의해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다. 특히, 정치에 있어서는 일본의 전쟁책임은 강조한 사상이 마루야마의 말처럼 '무책임의 체제'라 함이 옳을 듯하다. 사실, 마루야마 전 수상은 전쟁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한 바 있지만,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에는

역사의 과오를 '절대적'으로 사죄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 없다. 다만, 보수우파와 진보와 중도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일본의 정치 현실이다.

문제는 독도도 촉발된 작금의 한일관계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 관련 발언은 우리 국민에게 통합함은 주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일본의 보수우파에게 독도의 분쟁지역화와 이를 통한 세력 결집이라는 명분과 힘을 실어준 반면, 합리적인 사고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온 세력에게는 그들의 입지를 축소시켜 버린 셈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매체이면서 일본의 전쟁책임에 있어서 보수우파를 질책해 온 아사히 신문마저도 이 대통령의 일왕 관련 발언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본 내의 합리적 세력을 응원하고, 역사의식이 결여된 보수우파의 혼동에 발미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 고인인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이다. <광주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민주당 대선 경선 초장부터 파행이라니

민주통합당의 이른바 '비(非)문재인' 대선주자들이 후보 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 방식에 반발해 제주지역 재투표 등을 요구하며 경선 보이콧을 시사, 초장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민주당이 '엄지 혁명'을 목표로 도입했던 모바일투표 방식이다. 현행 톨레라로 선거인단이 기호 1~4번 후보의 이름을 모두 들은 뒤 투표표를 해야 하고, 후보를 거명하는 안내 메시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후보 번호를 찍은 뒤 전화를 끊으면 이표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순하규, 김두관, 정세균 후보 등은 이 방식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반발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기호 1~3번 후보 지지자의 경우 안내 메시지가 종료되기 전에 투표를 하고 전화를 끊으면 무효표로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문 후보는 기호가 4번이어서 이런 유형의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ARS에서 "끼끗끼 들지 않으면 미투표 처리될 수 있다"는 사전 안내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던 점도 반발을 사는 요인이다. 애초 경선기획단이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안내 메시지를 넣으라고 지적했지만 당 선관위가 넣지 않았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일부 재투표 등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비문재인 후보들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일 오후 예정됐던 울산 순회경선에 불참하기로 경선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 사전에 안내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선관위가 경선 틀을 부실하게 만들고 관리함으로써 경선을 파행으로 이끈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엄정한 처리와 철저한 선거관리만이 당이 선거혁명으로 내세우는 모바일 경선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 여성 '성수난' 대책은 없는가

최근 충남 서산의 한 피자 가게 여성 알바생이 사장에게 성폭행당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여성 알바생들이 업주들의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알바생들을 성희롱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들이 회생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광주 청소년상담센터나 여성민우회, 청소년인권노동네트워크 등에는 '사장이 야한 농담을 한다', '몸을 만진다' 등 하소연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무실에서 무슨 일 있었어? 법정에서 얼굴이 굳어있는데.'라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필자는 방청석에 아는 얼굴이 보고 있어서 긴장했다보다 하면서 둘러대기는 했지만, 그날 필자의 얼굴에서는 정의로운커녕 온화함이나 여유로움조차 묻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법정을 찾았던 몇몇 당사자들은 나중에 판결 결과를 보고서 필자나 재판부에 불만을 토로했으리라.

각종 소송에는 필연적으로 승패가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합리적인 조정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그러한 와중에 법관이 단지 경기를 진행하고 승패를 선언하는 심판의 지위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법정을 거쳐 간 모든 당사자들의 삶에 위안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노동청에 고소하는 등 여성 알바생들의 성적 수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한국여성노동자회 상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전체 성희롱 상담 264건 가운데 177건(66.3%)이 알바나 비정규직들의 상담이었다. 또 10명 중 9명이 사장 및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더니 업주들의 땅에 떨어진 윤리의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들 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충격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자살 충동 등 '성희롱 증후군'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업주나 상사들이야 벌이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겠으나 피해 여성들로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감독당국은 업주에 대해 필수적으로 여성 근로자 성희롱과 관련, 사전 및 상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업주들 스스로도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인식하에 보호하고 배려하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배진호

유난히도 두터웠던, 아니 아직도 열기가 다 가지지 않은 올 여름. 그래도 올해는 하계 올림픽이 열린 덕에 보름간이나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메달을 떠나 모든 선수들의 팽팽함이 참으로 소중했지만, 축구를 즐겨하고 즐겨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표팀이 4강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건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저번 주말 때마침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2의 고양팀인 광주FC의 프로축구경기가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오랜만에 축구장을 찾았다. 시민구단으로서 열악한 재정과 얇은 선수층이라는 한계 때문에 의학만큼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날은 평소보다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 들어와 열심 응원을 하고 있었다. 경기는 상당히 팽팽히 진행됐지만, 다소

축구경기를 보다가

과감한 심판의 페널티킥 판정으로 실점을 한 후 조직력이 흔들리면서 결국 2-1로 패하고 말았다. 그래도 잘했다고 선수들에게 박수 쳐 주고 경기장을 빠져나오는데, 뒤에 걸어들어 아저씨 두 명이 큰 소리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다. 상대팀에는 석연치 않게 페널티킥을 준 반면 광주팀에게는 여러 차례 혼전 상황에서도 페널티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불만의 요지였다. 필자는 흥분해 제량 범위 내에서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대화는 계속 진행돼 심판의 시력에 큰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상대편 감독과 친할 것이라는 억측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그런데 경기장과 법원이라는 장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유형의 대화는 판사인 필자에게 그리 낯설지 않게 다가왔다.

필자뿐만 아니라 법원의 모든 법관들은 하나의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수식, 수백 장의 증거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필요한 참고서적이나 판례를 끄적거리며 찾아본다. 치열한 재판합의 절차를 거친 후 실제 판결문을 작성하는 맞춤형 교재까지 참고하는 등등 참으로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이 마무리되고 각자 승패가 갈리

게 되면, 패소의 결과를 받은 쪽은 많은 불만을 쏟아내며 일주다. 이러한 반응이 좀 더 격해지게 되면 담당재판부에 대한 불신에까지 이르게 된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당연히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비난을 들으면 상심하게 된다. 삼라만상을 다 깨우치지 못한 한갓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항상 감내해야 할 숙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소송당사자나 법관이나 모두 조금 더 옳을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도적 개선 책임 것이다. 법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법률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소송구조 제도나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해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법원 부속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에는 법정을 찾는 실제 사건당사자들이나 소송대리인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담당 재판관의 재판 진행의 공정성, 친절도와 같은 여러 사항을 물었고, 각 조사 결과를 해당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은 그러한 제도보다는 내면의 진심이 아닌가 한다. 그러한 진심은 사건당사자의 괴로움에 대해 단순한 동정이 아닌 따뜻한 관심을 보여 줄 수 있는 온화함, 법정에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꼭 눌러 담았던 말들이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유로움, 어느 누구에게나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의로움과 같은 덕목들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관련 필자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화가 있다. 얼마 전 아내가 도대체 내 남편은 어떻게 재판을 하는가 궁금한 나머지 법정 에 찾아와 직접 방청을 한 적이 있었다. 그날 심에 돌아갔더니 아내가 대뜸 "오늘 사무실에서 무슨 일 있었어? 법정에서 얼굴이 굳어있는데."라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필자는 방청석에 아는 얼굴이 보고 있어서 긴장했다보다 하면서 둘러대기는 했지만, 그날 필자의 얼굴에서는 정의로운커녕 온화함이나 여유로움조차 묻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법정을 찾았던 몇몇 당사자들은 나중에 판결 결과를 보고서 필자나 재판부에 불만을 토로했으리라.

각종 소송에는 필연적으로 승패가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합리적인 조정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그러한 와중에 법관이 단지 경기를 진행하고 승패를 선언하는 심판의 지위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법정을 거쳐 간 모든 당사자들의 삶에 위안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광주지법 회생53단독 판사>

기고



정근택

이제는 '이도향촌(離都向村)'이다. 최근 귀촌·귀농이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베이비부머'가 우리 농어촌으로 발돋움을 돌리고 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2만명의 인구군(群)을 이르는 '베이비부머'는 1970년대 탈농의 중심세력이자,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다.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또 다른 사회구성 요인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생 제2막' 또는 '이모작'을 귀촌·귀농

을 통해서 파고고자 하는 이도향촌의 주역으로 인구유입이 절실한 우리 농어촌사회로의 화려한 귀환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6월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대도시 거주 베이비부머의 66.3%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으며, 이중 13.9%는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유형은 70%가 귀농이 아닌 전원·여가 활동 중심의 귀촌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귀농·귀촌 방식인 U-턴과 달리 J-턴 또는 I-턴을 선호하는데, 이는 연고를 중시하지 않는 베이비부머 및 도회지 출신 세대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70, 80년대 산업화와 일자리를 위한 '이촌향도(離村向都)'의 바람 속에 가장 피해

를 본 지역은 전남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젊은 인력들의 역외유출은 농어촌의 노령화를 촉진시켜 공동체 붕괴는 물론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지역사회 발전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농어촌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펴고 있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06년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인 '도시민유치담당'을 설치해 올해 6월까지 약 5500명의 타 시도민을 유치했다.

지금까지 전남의 귀촌·귀농은 강원도의 전원생활형과 달리 전업형이 압도적이다. 지난 4년 반 동안 전남으로 이주한 외국인 중 70%가 생계형인 전업형 귀농자다. 전남 이주자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전업형 귀농이

주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앞선 실태조사에서 보여주듯 농촌 이주의 큰 흐름은 전업형 귀농이 아닌 전원생활형 귀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에 맞게 전남이 준비된 '전원생활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맑은 공기, 저렴한 지가, 낮은 생활비, 그리고 겨울에도 따뜻한 우리 고장은 전원생활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 정도면 은퇴 후 건강한 삶을 기반으로 하는 '인생 제2막'을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에서 시작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바야흐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으로 도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시민 유치를 위한 기회는 왔다. 귀촌 성향이 강한 베이비부머의 은퇴 특수를 전남 농어촌지역 활성화와 인구 늘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베이비부머 2세대를 타깃으로 타시도와는 '다름'이 있는 도시민 유치활동 구상도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도 행복마을과장>

전공 무관 공인영어성적 강요는 사교육만 부채질한다

동생이 대학 4학년에 다니면서 졸업예정인데 영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물론 글로벌 국제화 시대에 영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영어를 무작정 너도나도 시키고, 그게 안되면 졸업마저 어렵게 만드는 구조는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 측에 드는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굳이 영어가 급하거나 반드시 영어가 필요한 학과도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어의 토익이 일정한 학교의 기준에 오르지 못하면 졸업이 어렵다면서 요즘 난데없이 학원에 다니느라 밤잠도 설치고 있다. 가족과 학부모들은 대학생들의 등골이 훑 정도로 비싼 등록금 때문에 힘이 드는데 이제는 졸업장 받기 위

해 영어학원에 추가로 더 다녀야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동생도 본인이 다니는 학과와 관련된 취업분야도 회사에서 굳이 영어의 유창한 실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전공마다 차이가 있고 공인 영어점수가 모두 필요한 것도 아닌데 졸업요건에 공인영어점수를 포함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학에서 진행하는 영어강의로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영어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 결국 비싼 돈을 다시 들여 사교육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의 상황과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졸업요건을 내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학원을 배반 불러주는 꼴이며 학교는 스펙 쌓는 공장에 불과하다. 개인의 필요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공인영어성적이나 자격증을 학교가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학의 행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렇기에야 전공은 무슨 필요가 있나 싶다. ▲정진득·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민석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